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 본격화	1
강원도민일보	22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맞춤형 복지정책 발굴할 것"	1
江原日報	03면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 지원 특위 5개월째 운영위 상...	2
강원도민일보	04면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 만연 ... 근무환경 실태조사 시급"	3
江原日報	16면	화천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4
강원도민일보	15면	인제 주민 힐링공간 '기적의 도서관' 개관	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보며	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6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김진호(위 왼쪽) 시의장·정재웅(위 오른쪽) 도의원...	6
江原日報	01면	신경호 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7
江原日報	04면	신경호 "재판 불구 직책 흔들림 없이 수행"	7
강원도민일보	01면	용역 중단·비촉재원 활용... 세수결손 대비 긴축 돌입	8
강원도민일보	03면	허리띠 졸라맨 도 지자체... 곳간 사수 초비상	8
江原日報	02면	폐특법에 석회석 폐광지역 포함 건의	9
江原日報	01면	화천댐, 용인산단 용수공급처 전략하나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자체 발굴 특례 '연구개발특구' 확보 사활	11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 유만마을, 반곡지구 개발구역서 제외	11
강원도민일보	14면	동해 경자구역 망상2·3지구 화재 '개발 속도'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바가지요금 논란, 상권 타격 우려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환기 발전 모색 더 치열해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저출산 위기 하나의 '해법'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의료 특구' 매출 14배 증가, 특구 기간 연장돼야	16

2023 06 29 ()

02

강원도민일보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 본격화

내달 3일 국회서 상생협력 협약 자치분권 발전 모색 정책포럼도

강원·제주·세종·전북등 4개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특별자치시·도상생협력협약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7월 3일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포럼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하며, 4개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자치분권 전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지자체 연구원, 분권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다. 내달 3일 열리는 포럼은 강원특별 자치도 성공 출범 이후 두 번째 공론화 의장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3~14일 춘천에서 일본·프랑스·스위스등 자치분권 선진

국 전문가들과 국내 자치분권 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강원 자치분 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 자치분권 글로벌 연대 협력을 구축했다.

'특별자치시·도상생협력 협약식'에 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등 4개 지자체 시·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 자치도의장 등 4개 지자체 시·도의장, 4 개 시·도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 전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장 등이 상생 연대 협약을 체결 한다.

이어지는 '지방시대 정책포럼'은 김 중석(전 강원도자치분권위원장) 강 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된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협력', 이기 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 표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은 pj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22

“장애인 일자리 제공·맞춤형 복지정책 발굴할 것”

장애인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식 인권증진 올림픽의 정 김 지사 선물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4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이 28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28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4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정호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주최하고 도장애인단체연합회·춘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등 도내 18개 시·군 장애인 단체와 관련 시설·기관 관계자, 장애인당사자 20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등 도 참석해 특별자치도 시대 장애인 복

지 증진을 약속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맞춰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의 새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특자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애써 주신 도민 모두에게 감사

하다”며 “도내 장애인 10만여명이 갈려 있지 않고 보다 특별한 강원도에서 살아가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김 지사에게 초대 특별도지사로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더욱 힘써달라는 의미로 올림픽의 징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 이전도 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와 정정순 도농아인협회 춘천시지회

과장이 대표로 나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정치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농아인 당사자로 구성된 수어 댄스팀 '핸드스피크' 등의 공연도 진행됐다.

올해 장애인복지대상 수상자인 임조성 회장과 이정희 씨, 여지영 안도인대 표에게상이 전달됐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수상자인 김신석·조정연 씨가 감사패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6명이 표창을 받았다.

도내 17개 장애인 복지 시설·기관·단체가 참여한 홍보부스가 마련돼 △장애인체육 및 심폐소생술 사용 체험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생산물 판매도 이뤄졌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부 춘천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자 30명이 행사 중 쓰러진 어르신을 돕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3 06 29 ()

03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 지원 특위 5개월째 운영위 상정도 못한채 계류중

강정호 자치도의원이 발의
운영위원장 “의회업무 과다
필요한 사안 즉시 논의할 것”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적기 개통을 지원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이 5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미리 특위를 구성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 1월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이 발의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적기 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 특위 구성 결의

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결의안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개통을 지원할 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정치역을 통해 지역 내로의 인적·물적 자원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부 노선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어 의견 수렴도 필요한 상황이다.

심영근(국민의힘·삼척) 운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며 의회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했기 이미 6개 특위가 있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바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04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 만연...근무환경 실태조사 시급”

도 차원 첫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
도의회 대안모색 다짐·유공자 표창

속보=재가·방문노인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피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본지 6월 27일자 4면)에 따라 관련 근무환경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계와 도의회 등이 법적 자문 지원 등 대안 모색을 약속하고 나섰고, 도사회서비스원은 근무환경 조사 등의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제15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7월 1일)에서 장효진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장은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오래 활동해온 당사자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폭력 피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껴도 호소할 신고 시스템조차 없고, 근무 중 트라우마 우려도 커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기종 도사회복지



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학훈)는 28일 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제15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협의회장은 “빈번한 성추행 문제 등을 현장에서 자주 듣고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도 법적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관희 도의원도 “절대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았지만 낮은 처우와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하다”며 “성폭력 문제 등 부정적 요소를 줄이도록 도의회도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돌봄 일터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가 모두 행복하도록 근무환경 조사 등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15년만에 강원도 차원에서 처음 열린 이날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은 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학훈)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강원도노인복지시설협회·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와 공동주최했다. 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최한 요양보호사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자 흥천노인전문요양원 소속 엄미경(57)씨가 수기를 낭독했고, 도내 요양보호사 26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3 06 29 ()

16



화천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화천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제51대 남궁은 이임 회장, 제52대 정상섭 신임 회장,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6 29 ()

15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민 힐링공간 ‘기적의 도서관’ 개관

지상 2층 규모 문화복합공간
계단식 열람공간·극장 조성
매주 공연·음악회 등 진행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이 28일 인제읍 상동리 현지에서 지역 사회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지역 주민들의 학습·소통·문화·힐링공간 역할을 하게 될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이 28일 인제읍 상동리 현지에서 최상기 군수, 이춘만 군의장과 의원, 엄윤순 도의원, 김장준 노인회 군지회장, 함장길 농협 군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공공도서관인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연면적 2996㎡에 지하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국·도비 55억원 등 총 사업비 146억여원이 투입돼 지난 2019년 착공, 지난해 말 준공됐다.

기적의 도서관 1층에는 원형 로비 공간내에 계단식 열람 공간과 열린 극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인제 전통 가옥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된 사랑채는 다목적 공간으로 다채로운 프

로그램과 행사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2층에는 2만5000여권에 이르는 다양한 도서가 채워진 종합자료실과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이 가능한 6개의 프로그램실이 꾸며져 있다.

기적의 도서관은 주민 대상으로 매 주마다 공연과 강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

며,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어린이 자료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밤 10시까지 개방되는 가운데 매주 금요일은 휴관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여초서예관·한국시집박물관·박인환문학관 등 4개의 공립 전문박물관과 지역내 10여개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시너지 효과 제고와 정보 접근성, 주민 이용 편의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상기 군수는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의 학습·소통·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 대표 문화복합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2023 06 29 ()

19

江原日報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뉴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다.

올여름 기상 예측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의 엘니뇨 현상이 2023년에 다시 발생해 더욱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물과 해변을 찾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올 5월31일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이라는 범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그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부터는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뿐만 아니라 저수지, 낚시터 등 수상활동이 이뤄지는 그 외의 장소들도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구역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CCTV와 드론을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물놀이 성수기철인 7-8월에는 위험 장소에 대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셋째, 금년부터 관할 지자체가 장소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물놀이 구역

강원포럼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을 직접 지정, 구명환 발사장치와 무인감시장비(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연안안전지킴이, 119신속수난구조팀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9,609점의 시설과 장비를 배치하고 580여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보며

그러나 이런 시설 확충과 제도적인 대책만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빠른 산업화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외형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대충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작은 것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선진의식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도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종 대책과 안전수칙, 수많은 예방교육이 이뤄

진다고 해도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 잡은 대강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허망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의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의 의식구조 또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컨

센서스(Consensus·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상안전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여름철 각종 행사와 연계해 수상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장소별 사고 예방 및 사고시 대처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생존수영 교육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6 28 ()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은 29일 오후 3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춘천대첩 평화 문화 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10



김진호(위
왼쪽)시의
장·정재웅
(위 오른
쪽)도 의

원·유환규 시의원은 2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 추진대회에 참석, 현안을 살펴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2023 06 29 ()

01

江原日報

신경호 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사전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
춘천지검 6명 재판에 넘겨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당선 이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신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기소됐다. ▶관련기사 4면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자 중에는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인 A(50)씨도 포함됐다.

A씨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사전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A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소됐던 전직 교사 B씨도 뇌물 공여 혐의

가 더해졌다. 또 철원의 모 초교 교장 C씨, 건축업자 D씨, 컴퓨터장비업자 E씨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운영되는 데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선이 되면 임용, 사업 참여, 장비 납품을 해 주는 대가로 A, B, C, D, E씨로부터 500만~1,000만원씩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출발했다. B씨는 신 교육감 측에 도교육청 체육특보 임용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했다.

춘천지검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2023 06 29 ()

04

江原日報

신경호 “재판 불구 직책 흔들림 없이 수행”

도교육감 1주년 앞두고 파장
학력 향상 등 정책 타격 우려
일각 자진사퇴 요청 날선 비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7월1일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두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학력 향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 교육감의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

신경호 교육감은 28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

민과 학부모님,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험 없이 달려온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과 별개로 교육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는 현직 교육감의 기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말 교육청 고위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사안에도 전 대변인 등 교육감의 측근

이 연루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신 교육감이 추진해 온 여러 정책과 활동도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력 향상’ 정책을 비롯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을 위한 정치권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교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 취임 2년 차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각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두가 특별한 교육 연구원이 이날 논평을 통해 “강원도 민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는 등 일각에서는 높은 수위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선영기자

2023 06 29 ()
01

강원도민일보

용역 중단·비축재원 활용...세수결손 대비 긴축 돌입

강원도 1분기 지방세 징수액
지난해 동기대비 888억원 감소
사업 기준 상향·효과 미흡 일몰제
시·군 2회 추경 감액까지 진행

만원 초과 사업으로 변경하고, 공통연
구용역비를 지원할 때 지휘부 사전 보
고를 거치도록했다
도관계자는 "기존에 용역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화려하게 치러
지는 행사 등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라
며 "예산절감과 함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각 시·군도 비상이 걸렸다.

속보=국세·지방세 감소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본지 6월 26일자 1면)이
걸리면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비상재
정운영에 돌입하며 세수 급감 대책 마
련에 긴급히 착수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춘
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은 세입 전망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 상황에 실질적
인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 징수가 감소하자 춘천시가 정
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도 최대
548억원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자
춘천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 관리
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시는 세수악화 대비차원에서 재
정효율화 조치안을 발표, 비상재정운
영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 세수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도
타이트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지역
에 곧 미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재
정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발표
한 올해 1분기(3월 기준) 광역자치단
체 지방세 징수액 감소율을 보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8억원 덜 걷
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도는 세수 결
손을 막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에 고삐
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을 기존 2200만원 초과 사업에서 2000

원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484억
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돼 비축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820억원)을 활
용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책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교부세
479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밖에 15개 시·군들도 정부의 교부
세 감소에 대비해 긴축재정 운용 등 대

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속초시는 올
해 2회 추경에서 전부분 예산을 삭감하
는 감액 추경을 진행하고, 내년도 분
산 편성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도와 각

시·군 관계자는 "세수 확보 작업이 비
상이다. 기존 진행 사업들에 대한 과
감한 칼질과 용역 중단, 초긴축 재정관
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승은·김덕형 ▶관련기사3면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03

허리띠 졸라맨 도 지자체... 곳간 사수 준비상

침체 장기화 세수 부족현상 심화
춘천 시비 50% 초과사업 사전협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각 시·군 지자체 곳간 지키기
가 초비상이다.
춘천시는 비상재정운영 추진 및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부터 50억원 이상 투자사업
과 시비 부담율이 50%를 초과하는 사
업에 대해선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합검토 후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협의 없이 시비 매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엔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총사업비의 10% 이
상 증액이 필요하면 예산부서 심사를

거쳐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
다. 육동한 시장은 "시 유관기관들도 같
은 기조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
도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시는 비축재원인 통합재정안정
화 기금(820억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세출 구조조정 강화에 나선다.
정책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일
몰제를 시행하고, 지자체사업을 원
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와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
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보조금 일몰
제' 추진에 나선다.
여기에 집행 부진사업 감액(이월에
산 사전심사제), 정부 공모사업 재원조
달 검증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
감도 시행 방침이다.
강릉시 역시 긴축재정 작업에 나섰

고, 동해시는 현금지출과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정 지출 최소화
에 착수했다. 태백시는 올해 하반기 추
경 국도비 매칭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
만 편성 등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
을, 속초시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전부
문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진행
하고 내년도 분예산 편성시 올해 수
준으로 예산 동결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정운
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

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1300억원 규모)에
서 세수 결손금액 일부를 활용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다.
영월군은 경상 경비를 지난해 수준
으로 동결하고, 사업 재검토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비축하기로 했
다. 정선군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
정안정화 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올해 2
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최대 200억원 선

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만 추진한다.
화천군은 지난해 9월 예산편성 작업
당시 교부세 감액을 고려해 편성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에 건전성
을 둔 상태다.
양양군은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감
액 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밖에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양
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도 긴축재정을
서두르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승은·지역종합



◇강원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내 한옥타운에서 민선 8기 제5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폐특법에 석회석 폐광지역 포함 건의

강원자치도시장·군수협 정례회

강원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내 한옥타운에서 김진하(양양군수) 회장 주재로 민선 8기 제5차 정례회를 열고 석회석 폐광산 대체산업 개발 및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 특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전국 최초로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창조적 복구를 통해 시행 기반을 마련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사정상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어 국가 및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석회석 광산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등에 전국(104개소)의 52.8%(2022년)인 5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생산량은 전국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4곳(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나 석탄 폐광지

위주로 지정돼 있어 석회석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및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해시는 전국 최초로 석회석 폐광지를 친환경 관광시설로 개발하고 있지만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거주제한 시 직업군인 예외’, ‘폐광지역 제조업체 수의계약 확대 및 우선 구매비율 지정 요청’, ‘500kV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및 지중화 건의’,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건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건의’ 등의 안건을 협의했다. 동해=정익기기자

江原日報

2023 06 29 ()
01

화천댐, 용인산단 용수 공급처 전략하나

〈반도체 국가산단〉

국토부·삼성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물 공급에 이용 계획
강원자치도 ‘자칫 실익 없이 용수만 내주는 꼴’ 우려 제기
‘역점 과제 원주 클러스터에 활용 가능’ 기대 섞인 시선도

삼성이 30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의 용수를 끌어 쓰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공업용수로 사용된 적이 없는 화천댐 물이 대거 용인으로 공급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용수 공급처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도를 낼 경우 화천댐의 풍부한 물을 함께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도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난제였던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팔당댐 외에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2042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필요한 용수는 일일 65만톤 규모다. 2035년 기준 팔당댐의 취수량은 일일 67만톤 수준으로 추가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화천댐에서 일일 190만톤의 물을 방류하면 하류인 팔당댐의 수량이 늘어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물

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용수 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그간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정비해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일 50만톤 이상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원주시가 아직 마땅한 용수 대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은 화천댐의 물을 끌어 쓰는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을 수도권에 제공하면서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수도권 특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강원자치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화천댐의 일일 방류량 190만톤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용수를 공급한 후에도 산술적으로 100만톤이 남는 막대한 규모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화천댐의 물을 같이 사용하면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손쉽게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기존에는 화천댐의 물을 쓸 수 없어 소양강댐을 통한 용수 공급을 타진해 왔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에 더 이상 물을 빼앗기지 않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반도체 기업과 생산시설 등을 유치해 수요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화천댐의 막대한 물이 용수로 풀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수도권의 각종 개발계획에 이용하려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며 북한강 수계에서도 화천댐과 소양강댐의 용수 일부가 중부권의 사실상 마지막 수원(水源)”이라며 “그동안 활용이 불가능했던 화천댐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춘천 자체 발굴 특례 ‘연구개발특구’ 확보 사활

**육동한 시장 추진계획 발표
과기부 협력 지정요건 완화
TF팀 구성 구체화 방안 돌입**

육동한 시장이 28일 강원특별자치도 법 연구개발특구 특례와 관련 “거의 사라질 듯한 법안을 춘천시가 다시 살려 만든 법안”이라며 해당 특례를 반드시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의 특별자치도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자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특례임

을 다시 천명하면서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춘천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상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부 출연기관 3곳, 대학 3개,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1개, 과학기술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포함,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TF팀을 만들어 특구 구체화하는 방안에 돌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시행령 제정도 준비해야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이르면 내달 중 과기부 장관을 만나 연구개발특구 춘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제 지원과 감면 특례가 부여되며 공공·민간의 단독·공동 연구소 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의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원에서 천연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본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육동한 시장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선 특별자치도법으로 요건을 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구체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춘천 R&D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원주 유만마을, 반곡지구 개발구역서 제외

**토지구 설문서 반대 의견 우세
마을 사유지 사업 지구서 제척
LH “사업 계획안 재수립 예정”**

속보=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추진되는 정부국유재산 개발사업의 편입에 반발해 온 유만마을(1월 13일자 웹 보도 등)이 결국 사업 구역에서 제척된다. 분지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

사(LH) 강원지사는 최근 원주시에 정부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반곡지구 토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LH가 일부 사유지 소유자들의 반발에 따라 사업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찬성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 78만 967㎡ 가운데 국방부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유만마을과 월운정마을 일대 22만 8000여㎡

로 약 28%에 달한다. 지난해 사업 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통해 마을 편입 계획을 알게 된 유만마을 주민들은 LH 반곡지구 토지수용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 주변 개발로 호재가 예상되는 삶의 터전이 공공개발 사업으로 헐값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며 제척을 지속 요구해 왔다. 사유지 소유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찬성률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75%에 훨씬 못 미친

14% (43명)에 불과했다. 반대는 39% (124명), 무응답은 48% (153명)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53만여㎡의 군 소유 부지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H측은 “주민들이 먼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사유지는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다”며 “사업 계획을 재수립, 내년쯤 시에 다시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14

동해 경자구역 망상2·3지구 호재 ‘개발 속도’

SPC자본금 1000억원으로 확대
포스코, 대주주·시공사로 참여
하반기 공공기반시설 착공 예정

동해권 경제자유구역 망상2·3지구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결과 동해권 경제자유구역 중 망상2지구 엠에스호텔앤리조트와 망상3지구 엠에스글로벌리조트SPC(특수목적법인)가 지난 26일 서울사무소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을 현재 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SPC주총에서는 또 망상2지구 대표이사에 박태규 씨(애경그룹 출신)를, 망상3지구 대표이사에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3지구 리조트해변의 망상해안사구식물원 일대.

필훈 씨(전 포스코건설 고문)를 새로 선임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최대 지분으로 참여하고 책임시공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망상3지구의 경우 이같이 자본 증가

예정에 이어 국내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4위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은 망상3지구의 경우 올 하반기 중 공공기반시설을 착공하는 등 개발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망상동 393-60번지 비개발지역(망상컨벤션센터 일원) 일대 14만 2000㎡ 규모의 경자구역 망상3지구(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는 ‘글로벌리조트 콤플렉스’를 콘셉트로, 36층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인피니트폴, 프리미엄 쇼핑몰, 호텔아카데미,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이 들어선다.

망상2지구는 망상동 724번지 동부복재유통센터 일원 22만 1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망상2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기반공사를 착공해 5성급 호텔, 아트뮤지엄,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 ‘아트뮤지엄 콤플렉스’ 콘셉트의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인수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 19

바가지요금 논란, 상권 타격 우려

-상황 확인 없는 문제 제기, 지역 이미지 훼손

여름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불거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지역 상권이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전후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바가지요금으로 단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금 폭탄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만으로 지역 축제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과 상가에 큰 타격을 주게 돼 무분별한 논란 만들기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바가지요금 시비는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인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와 강릉단오제에서 나와 시선을 끌었습니다. 춘천의 경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름 10cm 크기의 감자전을 3장에 2만5000원에 판매했으며, 닭갈비도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춘천시와 축제조직위원회는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는 닭갈비는 250g 당 1만4000원에 판매됐으며, 감자전은 옛날 가격표를 사용한 탓에 2만5000원으로 기재됐을 뿐 실제로 1만5000원에 결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상인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한 가격 협의, 매일 가격·위생 확인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대처에 좋은 평을 받았지만, 축제 막판

SNS에서 불거진 '슬러시 8000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요금 논란이 이슈화하자 여름 축제와 피서 시즌을 앞둔 상권과 지자체도 곤혹스러워합니다. 문제가 부각되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해 상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고정 관념도 바가지요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제주도 등 타 지역 음식점이나 외국 여행 시에는 한끼 5만~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음식을 즐기면서, 도내에서는 1만원 안팎의 가격에도 불만을 제기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은 손해를 보면서 영업하라는 것이냐는 불멘소리까지 나옵니다. 축제장 판매 가격은 대부분 시내 외식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의 바가지요금은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행사장의 음식 가격은, 축제 이미지와 흥행을 위해 입점 상인들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요금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단속 중심의 가격 관리도 능사는 아닙니다. 지자체는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6 29 ()
/ 19

전환기 발전 모색 더 치열해야

-민선8기1주이후 방향성<상> | 시군 연대전략강화

7월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 여부를 파악하고 전망하며 과제를 도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로 강원도정은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됐습니다.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여당이 거머쥔 정치지형 변화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여건 발전으로 귀결돼야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외형을 갈아타긴 했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는 발전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감은 실망으로 더 쉽게 바뀔 수 있기에 1주년 이후 행보는 전환기에 걸맞은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임기 4년 중 절반을 향해가는 시점에 대한 평가는 자치행정과 의회에서 점검하겠지만, 평판과 평가를 하는 주체가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자화자찬에 머물 수 있기에 1주년을 계기로 지역정책에 대한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고 수렴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발전 촉진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1년의 경과를 따져 필요하면 수정 보완을 가해 새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열린 자세가 요청됩니다.

당선 전에 내세운 공약 이행 정도와 취임 초기에 이루고자 한 목표에 근접했는지 혹은 미흡했는지 아니면 중단됐는지 그 성취는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추진해 온 굵직한 국가사업 및 중앙정부 시책사업 선정에 들기보다는 배제된 경우가 더 많으므로 계획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국가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중심에 충청권 및 남해안 벨트로 산업생태계가 재편되는 흐름에 있기에 강원특화형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강원특화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별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 10만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가 대다수인 도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자생력을 갖추는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 삶은 광역행정보다 기초자치 능력 여하에 더 좌우됩니다. 지역특화 발전은 시군 독자적인 움직임도 있겠지만, 경제권역 및 사회여건이 비슷한 시군 간 협력 연대가 병행돼야 효율적입니다. 다방면에서 시도될 수 있는 시군 연대 전략이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 06 29 ()

/ 19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저출산 위기 하나의 '해법'

도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시간 분석 통산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도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여성 월 185만5,000원, 남성 월 283만9,000원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4.1%에 달했다. 도내 성별 임금 격차는 제주(27%), 대구(32.1%), 세종(32.4%), 전북(33.7%)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기간 도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32만6,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다. 전국 평균(274만9,000원)보다 42만원 낮고, 전국 최고 임금을 기록한 세종시(329만6,000원)와 비교하면 100만원 가까이 모자라는 액수였다.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내 성별 임금 격차는 공공행정·국방 업종의 경우 39.9%로 가장 컸고, 제조업(37.9%), 전기·가스·증기 공급업(37.7%), 농림어업(36.6%), 금융·보험업(36.2%)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0.7%)이었다. 여성을 향한 차별·불공정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셈이다. 또 30대를 기점으로 남성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 고용률

은 급락한다. 원인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등이 꼽힌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 실태를 보면 경력단절 이후만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차별이 존재한다. '채용 시 성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남성 선호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밀려난 여성들의 고용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과 차별을 뚫고 직장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결국엔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별 임금 차이가 도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27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여성들이 비혼과 출산 거부를 택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단순히 비용 증가의 부정적 측면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의미다. 지역 소멸 위기 등 최악의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금 평등이 선결 과제다. 무엇보다 여성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고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제도나 임금공시제를 넘어 채용, 임금, 승진 등 노동 현장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구시대적 관행의 타파,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사회적 제도들까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6 29 ()

/ 19

‘道 의료 특구’ 매출 14배 증가, 특구 기간 연장돼야

국내 1호 규제자유특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2019년 8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구 참여기업의 연 매출은 2019년 35억원에서 지난해 말 453억원으로 14배, 연간 수출액은 48만 달러에서 286만 달러로 6배 증가했다. 4년간 특구에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의료기기 인허가, 해외규격인증 등 45건의 특허 및 인증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이다.

문제는 올 8월8일 특구 기간이 끝난다는 데 있다. 기간을 연장해 성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한국 경제의 오랜 숙원을 달성하고, 아직도 많이 남은 경제 규제를 대거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그동안 특구를 설치할 때 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수용해 왔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업 주도권을 신장시키고, 필요 없는 규제는 지역별로 대폭 철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인정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특구 지정의 본래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통계로 보면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2019년 말 한국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이 비교적 심하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18%와 일본의 34%를 크게 웃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 집중도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7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00대 기업 본사 중 754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불균등 발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국토 등 자원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참여기업, 2019년 35억원서 작년 말 453억원
연간 수출액은 286만 달러로 6배 늘어
2차 연장으로 성과 더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안 된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비해 지역의 대학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수도룩하다. 이런 상황에 지역 특구를 조성해 수출 등 성과를 이뤄내면 지역은 활기를 띠며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한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2021년 8월 특구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해 2년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2차 연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는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해 이번에 다시 특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